

#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뉴스보도에 나타난 프레임 분석연구\*

최선욱\*\* · 유홍식\*\*\*

이 연구는 프레임 연구시각을 적용해 공영방송 KBS 사장의 해임과정에 대한 국내 일간지의 뉴스보도를 분석하였다. 47개 일간지의 총 470개 기사를 대상으로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해임과정과 관련된 기사는 진보성향의 일간지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보수성향의 일간지는 정연주 사장에 대한 부정적 기사, 진보성향의 일간지에서는 긍정적 기사가 훨씬 많았다. 프레임 분석결과, 분석 대상 일간지들 모두에서 일화적 프레임 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보수성향의 일간지에서는 해임의 원인·절차 프레임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진보성향 일간지는 언론독립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였다. 9개 세부적인 뉴스 프레임 중에서 보수성향의 언론은 해임원인 프레임에서 경영책임, 해임절차, 집단갈등을 강조한 반면 진보성향 언론의 경우, 언론독립과 해임절차 프레임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모든 신문이 해임과 관련된 인용집단 중에서 자사의 이념적 성향과 유사한 전문가·단체 등을 선택적으로 더 많이 인용하였다. 법원의 판결내용과 이를 보도한 뉴스보도를 비교한 결과, 법원의 판결내용과 해임의 실질적인 원인으로 보도되었던 내용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프레임, 공영방송, KBS, 해임, 갈등보도

## 1. 문제 제기

한국사회에서 공영방송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정치권력과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립과 갈등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다. 지배권력으로 등장한 정치권력은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막강한 파급력을 가진 방송을 자신들에게 우호적으로 만들려 시도하고, 공영방송 종사자들은 이에 반대해 온 것이다. 방송, 특히 공영방송은 정치적 영향이나 상업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를 통해 정보·의견·비판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공론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Prince & Raboy, 2003).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공영방송의 최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임명권은 법률에 의해 정권에게 보장되어 있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왔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권력과의 대립과 갈등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 후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공영방송 KBS의 최고 경영책임자인 사장이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었다. 이전 정부인 노무현 정부에 의해 재임명된 정연주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이 아닌 형식으로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경영상의 책임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초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으로 촉발된 촛불 집회에 대한 KBS의 보도내용을 둘러싼 갈등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KBS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으며, 일부 보수성향 신문들이 이명박 정부의 지지를 하락 원인을 정연주 KBS 사장 때문이라고 주장한데서 비롯된 것이다(김동훈, 2008). 공영방송 KBS와 이명박 정부와의 마찰은 이념적 성향을 둘러싼 대립이며, 이 과정에서 보수적 시민단체들과 언론들이 대립의 확산과 고조에 참여한 형태라 할 수 있다.

\* 논문작성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익명의 세 심사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박사과정(sunwooky@gmail.com)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부교수(hsyu@cau.ac.kr)

언론의 사회적 역할 중 하나는 갈등조정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즉, 언론은 사회집단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갈등의 중재자로서 규범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이정춘, 2000). 하지만 언론은 사회적 이슈나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보도하기보다 뉴스소비자들의 관심과 시선을 유도하는 데 유리한 갈등에 보다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Neuman, Just, & Crigler, 1992). 또한,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쟁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변동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지배권력 집단의 옹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이기까지 한다(양정해, 2001). 한국 언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들 중 하나는 언론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편파적 편집보도이다(최영재, 2007). 이러한 편파적 또는 편향적 보도는 수용자의 이슈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전달된다면 뉴스소비자의 여론 형성과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준웅, 2001). 국내 언론들은 이념적 편향성을 기반으로 작성된 뉴스를 통해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갈등적·분열적 사회 분위기에서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의 언론 모두에서 각자의 안정적인 구독자 유지를 위해 이러한 경향적 보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갈등 이슈에 대해 언론 보도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은 프레임(frame) 분석방식을 적용해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언론이 사회적 이슈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강조·축소·배제하는 즉, 특정 프레임을 통한 뉴스의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Entman, 1993; Pan & Kosicki, 1991).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현실이 객관성을 표방한 재구성된 현실이라는 터크만(Tuchman, 1978)의 주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뉴스 프레임이 현실의 재구성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기틀린(Gitlin, 1980)은 이러한 뉴스 프레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패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많은 프레임 연구들은 사회적 이슈, 특히 갈등적 사회 이슈에 적용되는 프레임을 탐구해온 바 있다(박경숙, 2002; 박선희, 2001; 양정해, 2001).

본 연구는 2008년에 발생한 사회적 갈등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의 해임과 관련해 국내 주요 일간지들이 어떠한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언론사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뉴스구성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에 대해 뉴스에서 사용된 인용(quotation)이 어떠한 성향을 가진 전문가 또는 집단으로부터 획득되어 뉴스 프레임 형성에 관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뉴스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인용이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과정에서 본래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뉴스 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한 ‘편향적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아울러, 뉴스기사와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에 대한 법원판결 내용을 비교해 봄으로써 국내 일간지들이 어떠한 뉴스 프레임을 사용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념적 성향에 차이를 보이는 국내 일간지들이 뉴스 프레임을 통해 KBS 사장의 해임이라는 현실, 그리고 법원의 판결 내용을 어떠한 사회적 현실로 ‘구성’하려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2.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고찰

### 1)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과정과 쟁점

KBS 사장이 경영상 책임을 이유로 면직된 경우는 정연주 사장이 두 번째 사례에 해당된다.<sup>1)</sup>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은 2003년 4월 28일 임명되어 전임 사장의 잔여임기를 마치고, 2003년 6월 30일 KBS이 사회의 제청을 받아 첫 임기를 시작하였다. 정연주 사장은 2006년 11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KBS 사장으로 재임명되었으며, 임기는 2009년 11월까지이었다. 200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정부와 공영방송 KBS 간에 보도내용에 대한 일정한 갈등이 있었다. 물론 이명박 정부 출범이전에도 갈등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보수 시민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KBS의 보도내용, 재독학자 ‘송두율’에 대한 KBS의 특집 다큐멘터리 등을 편파방송이라고 규정하고, KBS와 갈등을 보인 바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KBS와 정부간 가장 큰 대립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시위에 대한 보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와 KBS와의 갈등이 사실상 정연주 사장의 해임과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해임 과정은 2008년 5월 15일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KBS·MBC정상화운동본부’라는 보수성향의 3개 시민단체가 KBS를 상대로 한 국민감사청구<sup>2)</sup>를 감사원에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국민감사 청구 이유는 첫째, 정연주 사장 취임 이후 KBS의 5년간 누적적자가 1,500억 원에 이르렀으며, 둘째 2003~2004년간 평균 1년에 한 명꼴이던 특별 승격(승진)자가 20명으로 급증하였고 징계 중인 PD까지 승격시킨 것은 인사권 남용이며, 셋째 편파방송 지적을 받은 탄핵 방송, 송두율 등 좌익인사를 옹호한 방송을 한 점 등이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보수단체들의 국민감사청구내용 중 편파방송 관련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KBS 특별감사 실시를 결정하였고, 2008년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감사를 진행하였다. 감사원은 8월 5일 전체 감사위원회를 열고 정연주 당시 사장에 대해 KBS 부실경영, 인사전횡, 사업위법 및 부당 추진 등에 문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감사원법’ 제 32조 제9항 규정에 따라 KBS이사회가 대통령에게 해임 제청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정연주 사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감사원을 상대로 해임요구 무효확인소송과 해임요구 효력의 집행정지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2008년 5월, 정연주 사장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조사 내용은 KBS가 국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반환청구 소송을 포기하고 합의처리 한 것에 대해 정연주 사장의 배임혐의 여부이었다. 당시 KBS는 주요 수입원인 텔레비전수신료가 방송용역의 대가가 아닌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을 충당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이라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영등포세무소가 부과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약 2,448억 원에 대해 세금환급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1심에서 KBS가 승소하였음에도

1) KBS사장이 경영상의 이유로 면직된 첫 번째 사례는 1990년 2월 서영훈 사장이다. KBS노조에 협조적이었던 서영훈 사장을 직원에 대한 법정 수당 지급을 변칙적인 예산 지출로 몰아 해임한 것이다. 이는 노태우 정부가 1980년대 말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방송 민주화운동을 잠재우고, 공영방송KBS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국민감사는 20세 이상 성인 300명 이상이 서명하여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불구하고, 화해조정을 통해 일부만 돌려받은 것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행위일 수 있다는 형사고발에 따른 것이다.

2008년 8월 8일 KBS 이사회는 제589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감사원의 해임 제청 요구에 따라 정연주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1일 해임제청안을 처리하였다. 감사원은 KBS 이사회에 당시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면서 문책사유로 법인세 등 환급소송 졸속처리 등 경영관리 측면, 부당한 특별승격 및 팀장 인사 등 조직·인력운용 및 인사관리 측면, 위법한 별관·연구동 개발사업 등 방송시설 설치·운영 측면 등을 들었다(서울행정법원, 2009). 대통령의 해임결정 이후 정연주 사장 변호인단 측은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안 결의와 대통령의 해임권 행사가 현행 방송법내에서 적법한 절차인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여 법리적 쟁점이 되었다(장은교, 2008.8.9). 이전 방송법은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이 있었지만, 현행 방송법 제정과정에서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꾼바 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과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임명권만을 부여했으므로 대통령에게 해임결정권이 없다는 주장과 임명권자에게 당연히 해임의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법리적으로 대립한 것이다.

## 2) 공영방송과 정부의 갈등

공영방송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그 존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익·기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방송형태라 할 수 있다. 이는 상업적 압력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이 유지될 때만이 가능하게 된다(Prince & Raboy, 2003). 또한 공영방송은 정치적으로 독립될 때 시민과 사회를 위한 공적 책무와 공정한 방송의 이념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이진로, 2008). 그러나 한편으로 공영방송은 사회 구성원들 간에 합의하에 운영되는 모델로 사회내 각종 세력과 이해당사자들이 방송이라는 현상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며,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는 경쟁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힘들이 교차하는 매우 갈등적인 매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yvrtsen, 1992; McQuail, 1995; Kellner, 1990). 이런 공영방송의 대립적 배경은 정권의 특징에 따라 다른 운영논리로 나타나지만, 집권초기의 경우 대부분 공영방송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인사권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부들이 방송에 대해 국가의 개입과 조종이 강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공영방송 사장의 선임과정, 수행임기 및 방송운영의 독립성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강형철, 2006). 특히 박정희정권 초기부터 국내 언론정책은 이른바 ‘발전 저널리즘(developmental journalism)’(강명구, 1994) 또는 ‘개발언론’(유재천, 1991)에 해당하는 기능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했으며, 그 기저에는 권위주의 언론이론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이론에서는 방송을 포함한 모든 언론이 정부의 협력자이자 정부정책의 시행을 위한 수단으로 보며, 국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매스미디어를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Siebert, Peterson, & Schramm, 1956; 박승관·장경섭, 2000에서 84쪽에서 재인용). 국가는 자신의 정책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한편으로는 언론을 통제·억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동원한다. 정연주 사장의 해임과정에서 박재완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KBS 사장의 경우 방송의 중립성 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

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임자인지를 한 번쯤 검증하고 재신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신동아, 2008.8)고 밝힘으로써 권위주의 언론이론과 일련의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 사상에 따라 역사상 여러 국가들이 언론에 대해 직간접적 통제방식을 동원하는 한편, 언론회유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온 바 있다.

하지만 언론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는 시청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사실상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져 왔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중반 전두환 정권에 의한 방송통제는 시청료납부 거부운동을 초래한 바 있다. 이후 방송민주화운동은 방송정책수립과 방송사의 경영·편성에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점차 넓혀나갔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도 우호적인 여론형성의 필요로 하는 정부는 공영방송사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였으며, 보다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영방송사와 일정한 긴장관계를 형성해 왔다. 때로는 이러한 긴장관계가 갈등의 형태로 표면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공영방송의 방송내용에 대한 공정성 또는 편파성과 같은 가치적인 것에 의해 표면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1990년 서영훈 사장의 해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영방송사장에 대한 해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용이한 방법인 경영상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 3) 사회갈등보도와 프레임 연구

사회갈등의 개입자들은 타당한 주장과 적절한 토대에 근거하여 공중의 지지를 얻는 우호적 담론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Best, 1995)하고,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에 주목한다. 갈등 상황은 동일한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집단들이 해당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특정 집단은 자신들이 내리는 정의를 공중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인식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다른 집단들보다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규범적인 법 지식과 권한 등을 동원한다. 특히 언론은 갈등집단이 정통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의 관심 없이는 하나의 문제가 공중의 담론 영역에 진입하거나 정치적 의제로 채택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겹기 때문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론의 ‘우호적’ 관심이 공중으로부터의 신뢰 획득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공중에게 어떤 쟁점들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부각시키고, 어떤 결과들은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며, 특정한 전략들을 규정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박승관·주용범, 1995; Ericson, Baranek, & Chan, 1991). 따라서 언론의 호의적인 관심은 한 집단이 담론형성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 결정적이며, 다양한 이해집단들은 언론이 선호하는 이미지와 논점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한다(Gamson & Wolfsfeld, 1993).

그러나 이러한 경쟁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구조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 이슈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뉴스가 권력집단을 체계적으로 옹호하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자보다는 고용주를, 시위대보다는 경찰을, 새로운 사고보다는 이미 포획된 가치관을 선호한다는 것이다(Gitlin, 1980; Eldman, 1988). 또한 뉴스는 갈등을 단절적인 사건의 집합체나 입장의 차이가 극명한 두 집단간의 대립으로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Cohen, Adoni, & Bantz, 1990; Ryan, 1993). 일반적으로 하나의 갈등은 여러 단계를 거쳐 전개되는데, 뉴스는 갈등이 명확하게 공중에게 드러나는 단계, 즉 시위·소송·법집행 등과 같이 가시적인 사건에 주된 관심을 할애하고, 갈등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나 반대 집단의 동기 등에 대한 설명은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Gersh, 1992; Schmit, 1993).

갈등 보도를 연구한 학자들은 언론이 현실을 그대로 뉴스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각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레임을 통해 일종의 재구성된 현실, 즉 가공된 현실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터크만(Tuchman, 1978)은 뉴스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뉴스를 통해 구성된 현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된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 프레임은 결국 현실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특정한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측면들을 생략하거나 무시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일정한 방향의 해석을 유도하는 의미생산의 도구라는 것이다(Entman, 1993). 기틀린 역시 프레임을 통한 현실 재구성은 “현실에 대한 인식, 해석, 선택, 강조, 배제를 통해 이뤄지는 지속적인 재해석의 패턴이며, 이를 통해 미디어 담론이 조직화”된다고 주장하였다(Gitlin, 1980, p.7). 뉴스에서 프레임은 “전형적으로 사건, 의제 그리고 행위자라는 대상의 다른 주목화를 통해 기사화하는 과정의 일부”이다(Entman, 2004, 23쪽). 송용희(2005)는 프레임링을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할 때 그럴 듯하게 보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구성하고, 부각할 측면을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뉴스 이벤트조차 다른 속성을 포함하는 다른 버전으로 만들어 낼 수 있으며(Chyi & McComb, 2004), 같은 이슈라도 전혀 다른 기사로 프레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레임 분석은 생산된 뉴스의 텍스트의 의미를 각각의 관계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통해 어떤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발견하는데 유용하며 의미 구성효과에 대한 추론을 도와준다(이준웅, 2001, 2004).

뉴스분석에 사용되는 프레임 유형은 분석대상에 따라 또는 연구자들마다 다른 형태의 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뉴스프레임 분류기준은 연역적 접근방법과 귀납적 접근방법이다(Semetko & Valkenburg, 2000). 연역적 접근방법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프레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들 연구자들은 유럽 정치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를 분석하는데 ‘갈등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경제적 중요성 프레임’, ‘도덕성 프레임’, ‘책임 프레임’ 등 5가지 프레임을 제시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들 연구자들의 5가지 프레임을 적용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뉴스 프레임을 분석해 왔다(e.g., 박경숙, 2002; 우형진, 2006; Zillmann, Chen, Knobloch, & Callison, 2004). 귀납적 접근방법은 분석대상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프레임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다(김춘식·이영화, 2008). 귀납적 접근방법은 분석대상이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프레임들과 관련성이 낮거나, 기존과 다른 새로운 이슈를 다룬 뉴스보도의 분석에 사용된다. 연구자들은 분석대상 또는 표본에서 일정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석함으로써 프레임을 구성해내고, 이를 전체 분석대상에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또 다른 분류방식은 ‘일화적(episodic) 프레임’과 ‘주제적(thematic) 프레임’으로 분류하는 것이다(Iyengar, 1992). 일화적 프레임은 보도되는 이슈에 대해 심층적이라기보다는 사건중심적 또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프레임을 말한다. 주제적 프레임은 대조적으로 심층적이며,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려 노력하는 프레임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갈등보도는 사건중심 프레임이 지배적이며(Iyengar, 1992), 이슈보다는 행위를 조명하는 갈등보도의 관행은 행동이 가지는 오락적 가치와 언론의 객관성 지향에서 유래한다(Ericson et al., 1991). 그러나 사건 중심 프레임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원인에 대한 설명 부재는 갈등의 직접적 원인이 지금 현재 뉴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그 결과 사회구조적인 측면보다 소수의 개인에게 문제해결의 책임이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양정혜, 2001).

엔트만(1993)은 프레임 분석이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정의와 분석에 있어 현상에 대한 기술에 치중하는 경향으로 인해 혼란과 산만함이 발생하므로 분석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용과 이동훈(2005)은 이러한 프레임의 형식적 비체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고 미디어 담론의 텍스트 구성 관행들을 적용하여 프레임을 사건중심과 주제중심으로 구분한 후, ‘행위·추상’, ‘발화·결과’의 두 축을 기준으로 네 가지 차원의 프레임으로 유형화한 바 있다. 프레임 연구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Dimitrova, 2006). 즉, 프레임은 고정되어 있는 현상이기보다는 역동적인 변화과정을 거치는 주기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대상의 모든 관점이나 속성을 모두 보여주기보다는 지배적인 특징을 순간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다(McCombs & Ghanem, 2001). 또한 엔트만(Entman, 2004)은 사건, 주제와 함께 행위자를 프레임의 대상으로 보고 ‘9·11사건’에서 행위자 프레임 문제가 어떻게 사건 중심의 프레임의 원인이 되는지를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논의는 뉴스 프레임 구성 자체가 다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특정 사건에 대한 뉴스기사는 긍정 또는 부정적인 논조를 구성하는 데 있어 그 사건과 관련된 원인과 결과, 가치와 행위 등을 복합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사 내 의미 구성을 위한 프레임은 해당 사건이 다루어지는 일정기간 동안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사건과 관련된 행위자들이 직접적인 프레임의 대상이 되거나 프레임 구성을 위해 지배적으로 인용되기도 한다.

#### 4)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일간지들이 공영방송 KBS사장의 해임과정에 어떠한 프레임을 적용해 보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일간지들이 조직차원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에 대한 국내 일간지의 뉴스보도량과 지배적 논조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1>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에 대해 국내 일간지는 어떠한 유형의 프레임을 사용했는가?
- <연구문제 2-2> 국내 일간지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사용된 프레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갈등보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각 집단의 주장을 문화적으로 친숙한 인식틀을 사용해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장용호, 1987). 특히 권력 집단간 대립과 갈등이 존재할 때, 신문들은 자신과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는 권력집단과 파트너십을 갖는 ‘신문-정당’ 병행관계가 있다(Seymour Ure, 1974; 고영신, 2007에서 재인용). <연구문제 3>에서는 갈등의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특정 신문에서 지배적으로 인용하는 행위자를 해당 신문과 병행관계가 있는 집단으로 추출하고 해당 집단과 프레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4>에서는 KBS정연주 사장 해임의 실질적 원인으로 뉴스보도에 사용된 프레임과 법원의 판결내용을 비교함으로써, 각 신문들이 사용한 뉴스 프레임의 적절성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3>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에 대한 국내 일간지 보도에 인용된 행위지는 뉴스 프레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4>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과 이를 보도한 언론의 뉴스 프레임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3. 연구방법

#### 1) 자료의 수집

분석대상 신문은 보수 언론으로 대표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진보 언론으로 분류되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었다. 한국언론재단의 기사검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카인즈’(www.kinds.or.kr)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련 기사를 검색하였다. ‘카인즈’ 서비스에서 기사를 제공하지 않는 조선일보는 해당 언론사가 운영하는 ‘조선닷컴’(www.chosun.com) 서비스를 이용했다. 검색어는 ‘정연주’와 ‘KBS’를 사용하였으며, 총 664건의 검색결과 가운데 중복되거나 해임과 관련없는 기사는 제외했다. 조선일보 83건, 동아일보 95건, 한겨레 146건, 경향신문 146건 등 총 470건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기간은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3개 보수시민단체가 KBS를 상대로 국민감사청구를 했던 2008년 5월 15일부터 정연주 KBS 사장이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었던 2008년 8월 18일까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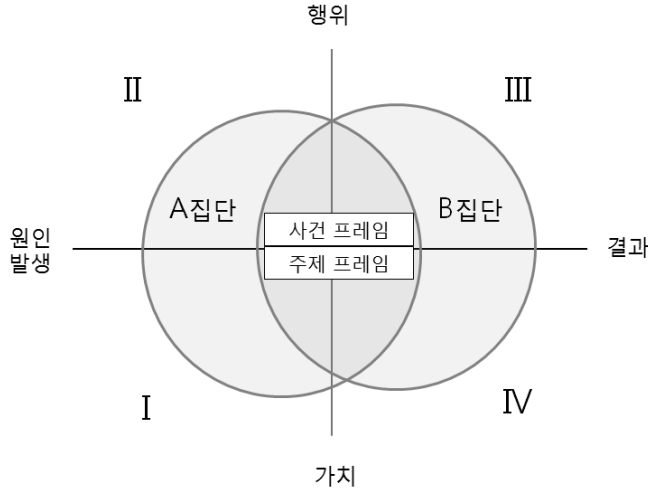
#### 2) 분석방법

##### (1) 분석단위와 프레임 유형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는 하나의 신문기사이었다.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과 관련된 분석대상 기사에서 한 가지 이상의 주제나 사건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프레임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신문 기사를 아이엔거(Iyengar, 1992)와 같이 일화적(사건)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으로 구분하였다. 일화적 프레임은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초점을 둔 것으로, 누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 또는 어떤 진술이나 절차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기술이나 감성적 묘사 등을 포함한다. 반면에 주제적 프레임은 왜 일어났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주어진 상황에 대한 배경이나 상황이 전개되어온 맥락이나 결과 등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원인과 결과, 가치와 행위의 두 축에 따라 구분된 4개의 유형으로 정연주 사장의 해임이 발생하게 된 가치-원인발생 측면에서 ‘체제유지 프레임(I)’, 행위적 원인 측면에서 ‘해임원인(절차) 프레임(II)’, 행위적 결과로 ‘대립 프레임(III)’, 마지막으로 가치적 결과로 ‘언론독립 프레임(IV)’을 추출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공영방송사 사장 해임에 대한 뉴스 프레임의 유형화

먼저 주제적 프레임에 속한 2차 프레임의 분류 방식을 보면, 체제유지 프레임(I)은 경영책임과 같은 표피적 해임 원인보다는 ‘해임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와 관련되는 프레임이다. 즉, 공영방송사 사장의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나 핵심권력 집단의 입장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과 KBS의 관계, 이명박 정부가 ‘국정철학의 수행’에 공영방송 KBS에 기대하는 역할 등을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언론독립 프레임(IV)은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이 가져올 결과에 주목한 것으로 기사에서는 주로 언론독립의 침해나 언론장악의 단어가 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으로 일화적 프레임에 속한 2차 프레임의 분류방식을 보면, 해임원인(절차) 프레임(II)은 “해임 절차 속에서 누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에 관한 것으로 보수단체의 국민감사청구, 감사원의 특별감사과정, 검찰의 기소, 이사회회의 의결과정 등에 관한 것이다. 행위-결과적인 대립 프레임(III)은 해임 절차의 주요한 단계와 결과 때마다 나타나는 사회세력간에 대립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3차 프레임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치-원인적 측면에서 체제유지 프레임(I), 가치-결과적인 언론독립 프레임(IV), 행위-원인을 규정하는 해임원인(절차) 프레임(II), 행위-결과적인 대립 프레임(III)을 9개의 프레임으로 세분화하여 추출하였다. 체제유지 프레임은 정권유지와 좌파 언급을 중심으로 하는 이데올로기 프레임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언론독립 프레임은 중심 단어나 문맥의 유사성으로 별도의 세분화된 프레임을 구성하지 않았다. 해임원인 프레임은 해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기된 경영책임, 편파방송과 함께 정연주 사장 개인의 도덕성과 해임권한을 포함한 해임절차의 4개 프레임으로 세분화 하였다. 대립프레임은 공영방송 KBS 사장의 해임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대립 프레임과 해임을 촉구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해임압박 프레임으로 구분하였다.

<표 1> 정연주 사장의 해임관련 기사에 나타난 프레임의 구분

1차 프레임	2차 프레임	3차 프레임	주요 진술 문맥
주제 프레임	체제유지 프레임(I)	정권유지	이명박 지지율, 국정철학, 정권프렌들리, MB개혁정책, 승자독식, 정상화과정
	인론독립 프레임(IV)	이데올로기	좌파, 차베스찬양, 적기가방송, 좌파집단
일화적 (사건) 프레임	해임원인(절차) 프레임(II)	경영책임	누적 결손 증가 등 부실경영, 인사권남용, 과오납한 2천억원의 환급 소송, 특별승진, 1,500억 원 적자, 직원 횡령 및 부도덕, 정보공개부실, 교향악단 방치, 지방송신소
		편파방송	광우병 괴담방송,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보도, 송두윘씨 관련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논란, 오보, 생중계 거부, 왜곡보도(이사회관련)
		도덕성	모럴해저드, 자녀의 미국국적, 법집행회피
	해임절차(과정)	검찰소환, 감사원출석, 출국금지, 해임권한, 배임액수분석, 해임 후 후속논의(새사장), 관련자 사퇴(해임)	
	대립 프레임(III)	집단대립	여-야당, 촛불시민-보수단체, 노동조합-사원행동(직능단체), 직능단체간, 충돌, 항의방문, 촛불집회
		해임압박	서명, 설문, 성명, 촉구시위

(2) 기타 분석 유목

기사의 논조는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으로 분류하였다. 정연주 사장에 대한 지지·우호·당부 또는 해임에 대한 우려 등을 포함하면 긍정적 기사, 비판·적대·공격·유감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정적 기사로 분류하였다. 중립적인 기사는 검찰의 소환, 이사회 일정 등 단순한 특정 사건, 감사나 해임절차에 있어 현 정부 측과 정연주 사장의 지지측의 입장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구분이 모호한 기사를 포함한다.

기사내 인용에 나타나는 개인이나 조직·단체라 할 수 있는 인용집단은 사건이나 주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자이거나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회세력을 의미한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과정에서 나타난 행위자는 분석대상 기사를 통해 추출 했으며, 해임에 긍정적인 집단(A집단),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집단(B집단)으로 구분하였다(<표 2> 참조). 기사 내에서 해임에 긍정적인 집단과 부정적인 집단의 의견 모두를 비교적 중립적으로 인용한 경우 별도의 A, B 양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용출처가 없거나 법원과 같이 중립적인 의견집단 등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표 2> 기사 내 인용집단의 분류

A집단	청와대, 여당, 검찰, 방통위, 문화부, 감사원, 국세청, 언론중재위원회, 보수시민단체, 이사회(장), KBS 노동조합, KBS 사우회, KBS내 여당 추천이사, KBS 전직직원, KBS공정방송노조, KBS내부 직원 및 모임, 기타
B집단	야당, 진보시민단체, 학계, 언론노조, 촛불시민, 아고라, KBS기자/PD협회, KBS내 야당 추천이사, KBS 시청자위원장, KBS, 정연주, 기타
A, B 양집단	A, B 집단 모두를 비교적 중립적으로 인용한 경우
기타	기사 내 인용출처가 없거나 중립적 의견집단 등

(3) 코더 간 신뢰도

코딩은 2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하였으며, 위와 같은 프레임을 숙지하기 위해 분석 기사를 대상으로 일정한 훈련 과정을 거쳤다. 분석대상의 기사 중 30건을 임의적으로 추출하여, 1차 훈련을 가졌으며, 불일치를 보인 프레임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를 거쳐 숙지하도록 하였다. 2명의 코더가 분석 대상 기사의 50%씩에 대해 코딩을 완료한 후, 전체분석 대상 기사의 17%(80건)를 임의적으로 추출하여 코더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를 측정하였다. 기사 논조에 대한 코헨의 카파값(Cohen's Kappa)은 0.91, 1차 프레임은 1.0, 2차 프레임은 0.81, 3차 프레임은 0.79, 지배적인 인용 집단은 0.89이었다.

4. 연구결과

1) 해임관련 보도량과 기사논조의 비교

분석 대상기간에 정연주 사장의 해임에 관한 전체 기사 470건은 조선일보 83건(17.7%), 동아일보 95건(20.2%), 한겨레 146건(31.1%), 경향신문 146건(31.1%)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사 중 이전 정부에 우호적이었던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현 정부에 우호적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비해 기사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연주 사장의 해임에 대한 기사 논조는 신문사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241.9$ ,  $df=6$ ,  $p < .001$ ).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에 비해 기사수는 적었지만, 정연주 사장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조선일보가 4개 신문사 중 정연주 사장에 대한 부정적 기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기사는 하나도 없었다. 동아일보는 감사원이나 검찰의 소환 등의 사건을 단순 전달함으로써 조선일보에 비해 중립적인 기사가 많았다. 한겨레는 정연주 사장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가 가장 많았으며, 부정적인 기사가 하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청와대, 방송통신위원회 및 감사원의 입장을 전달하는 기사도 적지 않아 부정적으로 분류된 기사도 약 22%에 달했다. 전체적으로는 신문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기사 논조는 대조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 정연주 사장에 대한 신문사별 기사논조의 비교

평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전체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논조	긍정	0	0	0	110	75.3	68	46.6	178	37.9	
	중립	25	30.1	45	47.4	36	24.7	46	31.5	152	32.3
	부정	58	69.9	50	52.6	0	0	32	21.9	140	29.8
전체(%)	83	100	95	100	146	100	100	100	470	100	

$\chi^2=241.9$ ,  $df=6$ ,  $p < .001$

### 2) 1차 프레임에 대한 분석결과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에 대한 분석결과, 신문사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62.0$ ,  $df=3$ ,  $p < .001$ ). 보수성향의 신문이 일화적 프레임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조선일보가 91.6%로 일화적 프레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해임의 배경이나 맥락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주제적 프레임의 비중이 보수적 성향의 신문사들보다 높은 43.8%와 44.5%로 나타났다.

대부분 갈등보도에서 일화적 프레임이 지배적이라는 기존 연구결과(Iyenger, 1992)는 본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특히 본 연구대상인 정연주 사장의 해임관련 이슈에서는 보수 성향의 신문에서 일화적 프레임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관련되면서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자사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반영하여 ‘왜 해임이 일어났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주제적 프레임이 전체기사의 절반에 가깝게 강조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분석대상이 된 신문사별로 정연주 사장의 해임이라는 사안에 대한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수성향의 신문사들은 뉴스소비자들의 관심과 시선을 유도하는데 유리한 갈등에 보다 주목한 반면 진보성향의 신문들은 갈등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해임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기사화했기 때문이다. 결국 분석 대상 신문사들은 기사가 중요하다고 간주하거나 기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1차 프레임에서부터 일정한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 신문사별 1차 프레임(일화적, 주제적)에 대한 분석

구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전체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주제적 프레임	7	8.4	10	10.5	64	43.8	65	44.5	146	31.1
일화적 프레임	76	91.6	85	89.5	82	56.2	81	55.5	324	68.9
전체(%)	83	100	95	100	146	100	146	100	470	100

$\chi^2=62.0$ ,  $df=3$ ,  $p < .001$

### 3) 2차 프레임에 대한 분석결과

앞의 <그림 1>에 제시된 4개 프레임에 대한 분석결과, 신문사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chi^2=71.1$ ,  $df=9$ ,  $p < .001$ ). 신문사별로 2차 프레임의 빈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해임원인 프레임이 196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대립 프레임이 129건(27.4%)으로 그 다음이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은 해임원인 프레임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데 반해 한겨레는 언론독립 프레임이 53건(3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해임원인 프레임(Ⅲ)→ 대립 프레임(Ⅳ)→ 체제유지 프레임(Ⅰ)→ 언론독립 프레임(Ⅱ)”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향신문은 “해임원인 프레임(Ⅲ)→ 언론독립 프레임(Ⅱ)→ 대립 프레임(Ⅳ)→ 체제유지 프레임(Ⅰ)”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한겨레는 “언론독립 프레임(Ⅱ)→ 해임원인 프레임(Ⅲ)→ 대립 프레임(Ⅳ)→ 체제유지 프레임(Ⅰ)”의 순으로 나타났다. 4개 신문사 모두 가치-원인

적 관점에서 다루는 기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 신문사별 2차 프레임 분석

구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전체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체제유지	5	6	6	6.3	10	6.8	15	10.3	36	7.7
언론독립	2	2.4	4	4.2	53	36.3	50	34.2	109	23.2
해임원인(절차)	47	56.6	50	52.6	46	31.5	53	36.3	196	41.7
대립	29	34.9	35	36.8	37	25.3	28	19.2	129	27.4
전체(%)	83	100	95	100	146	100	146	100	470	100

$\chi^2=71.1, df=9, p < .001$

#### 4) 3차 프레임에 대한 분석결과

신문사별 기사는 9개의 세부 프레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155.7, df=24, p < .001$ ). 우선 2차 프레임에서 유사한 기사빈도를 보였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3차 프레임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조선일보는 경영책임 프레임과 집단대립 프레임이 각각 21건(2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동아일보는 집단대립 프레임과 해임절차 프레임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일보가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의 직접적인 원인과 집단 간 갈등을 부각한 반면, 동아일보는 집단 간 갈등에 초점을 두고 해임절차를 주목했다는 점을 설명한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2차 프레임에서 다른 기사 분포를 보였으나 3차 프레임에서는 언론독립 프레임, 해임절차 프레임 순으로 오히려 유사한 기사빈도를 나타냈다. 이는 언론독립 프레임이 기사 내 단어 및 문맥의 유사함으로 인해 3차 프레임을 세분화 되지 못한 점에 기인할 수 있다.

<표 6> 신문사별 3차 프레임 분석

프레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전체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정권유지	4	4.8	3	3.2	9	6.2	15	10.3	31	6.6
이테올로기	2	2.4	3	3.2	1	0.7	0	0	6	1.3
언론독립	1	1.2	4	4.2	53	36.3	50	34.2	108	23
경영책임	21	25.3	17	17.9	7	4.8	5	3.4	50	10.6
편파방송	3	3.6	7	7.4	0	0	4	2.7	14	3.0
도덕성	9	10.8	3	3.2	0	0	1	0.7	13	2.8
해임절차(과정)	14	16.9	23	24.2	39	26.7	42	28.8	118	25.1
집단대립	21	25.3	31	32.6	37	25.3	25	17.1	114	24.3
해임압박	8	9.6	4	4.2	0	0	4	2.7	16	3.4
전체(%)	83	100	95	100	146	100	146	100	470	100

$\chi^2=155.7, df=24, p < .001$

3차 프레임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은 특정 프레임에 대한 뚜렷한 선택과 배제가 나타났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언론독립 프레임의 기사빈도가 무의미할 정도로 적었지만,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언론독립 프레임을 강조한 반면 경영책임 프레임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기사빈도만을 고려할 때 한겨레신문은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기사에서 편파방송 프레임, 도덕성 프레임과 해임압박 프레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 5) 기사 내 인용집단과 프레임 간의 관계

집단 A(해임에 긍정적인 집단), 집단 B(해임에 부정적인 집단)에 대한 인용빈도 역시 신문사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120.6, df=9, p < .001$ ). 해임에 긍정적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해임의 권고 또는 권한을 가진 A집단을 각각 52건(62.7%)와 48건(50.5%)씩 인용하였다. 특히 그 빈도는 조선일보가 동아일보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B집단을 주요 인용출처로 삼았으나 해임절차와 권한에 관여되어 있는 A집단의 의견을 일정정도 인용하였다. 보다 중립적으로 A집단과 B집단 모두를 인용한 기사 빈도는 유사한 프레임을 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에서는 동아일보의 빈도가 높았으며, 한겨레와 경향신문 중 경향신문이 38건(26%)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가장 지배적인 인용집단으로 KBS 노동조합(13건, 15.7%)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으며, 동아일보는 검찰 13건(13.7%), KBS 노동조합 11건(11.6%), 감사원 9건(9.5%) 순으로 인용했다. 반면 한겨레는 진보시민단체를 19건(13%) 인용하였으며, 경향신문은 야당과 진보시민단체를 각각 18건(12.3%)씩 지배적으로 인용하였다.

<표 7> 신문사별 인용집단 분석

구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전체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A집단(긍정적 집단)	52	62.7	48	50.5	29	19.9	41	28.1	170	36.2
B집단(부정적 집단)	3	3.6	9	9.5	43	29.5	56	38.4	111	23.6
A, B 양집단	10	12	22	23.2	16	11	38	26	86	18.3
기타	18	21.7	16	16.8	58	39.7	11	7.5	103	21.9
전체(%)	83	100	95	100	146	100	146	100	470	100

$\chi^2=120.6, df=9, p < .001$

신문사별 기사 내 인용집단과 프레임과의 관계는 <표 7>과 같이 나타났으며,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54.1, df=9, p < .001$ ). 해임에 긍정적인 A집단은 해임원인 프레임(85건, 50%)과의 기사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립 프레임 50건(29.4%), 체제유지 20건(11.8%) 순이었다. 언론독립 프레임은 15건(8.8%)에 불과했다. 반면 해임에 부정적인 집단은 언론독립 프레임(45건, 40.5%)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었으며, A, B 양집단이 모두 인용된 프레임은 해임원인 프레임(41건, 47.4%)이었다.

<표 8> 신문사별 인용집단과 2차 프레임간 의 관계

구분	A집단		B집단		A, B 양집단		기타		전체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체제유지	20	11.8	4	3.6	5	5.8	7	6.8	36	7.7
언론독립	15	8.8	45	40.5	15	17.4	34	33	109	23.2
해임원인(절차)	85	50	29	26.1	41	47.7	41	39.8	196	41.7
대립	50	29.4	33	29.7	25	29.1	21	20.4	129	27.4
전체(%)	170	100	111	100	86	100	103	100	470	100

$\chi^2=54.1, df=9, p < .001$

### 6) 법리적 판결내용과 뉴스 프레임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에 관한 뉴스 프레임이 신문사별 지배적인 인식과 태도로 인해 다양하게 사용되었지만 감사원이 제기한 실질적인 해임의 사유는 행위적 원인의 프레임 중 경영책임 프레임에 가까웠다. 감사원의 해임요구에 대한 법적 판결은 2008년 8월 11일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해임처분무효소송(2008구합32317)과 2008년 8월 20일 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에 관해 공소한 재판(2008고합887)으로 각각 2009년 11월 12일과 동년 8월 18일에 판결선고가 있었다.

감사원이 제시한 해임사유인 경영책임 프레임은 신문사별로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일보 21건(25.3%), 동아일보 17건(17.9%), 한겨레 7건(4.8%), 경향신문 5건(3.4%)순의 기사빈도를 보였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경영책임 프레임에서 감사원의 해임사유를 직접 인용하거나 해당 사유 모두를 인정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밝혀낸 정 사장의 위법·부당 사례는 방만 경영부터 인사 전횡까지 29건에 이른다. 국민의 수신료를 걷어 쓰는 국민의 방송을 이렇게까지 제멋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 정 사장은 팀장 승진이나 해임에 관한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사장이 임용한다고만 규정해 전권을 휘둘렀다. …… 정 사장은 노무현 정권 내내 KBS를 정권의 수호견(犬)으로 실컷 전락시켜 놓고는 이제 와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사장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야말로 소가 웃을 소리다. 정연주씨는 당장 스스로 물러나는 게 그나마 마지막 추한 꼴을 덜 보이는 길이다. ‘정연주씨, 감사원 발표 보고도 계속 눌러앉아 있을 건가’(조선일보, 2008. 8. 5.)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감사원 해임사유에 대한 KBS측의 반론이나 특정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검찰의 출석 요구를 일단 거부한 정연주(62) 한국방송 사장의 배임 혐의 논란의 핵심은 △법원의 조정권고로 끝난 소송 결과에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지 △국세청의 법인세 재산징 의지 여부 등이다. ……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정 사장의 배임 혐의를 밝혀려면 (검찰이)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배임죄를 물으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제3자에 이득을 안겨주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정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배임 의도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결국 이사의 ‘경영 판단’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BS “법원이 권고해서” 고발인 “KBS가 제안”’(한겨레신문, 2008. 6. 18.)

2009년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정연주 당시 KBS 사장측이 제기한 해임처분무효소송에 대해 KBS 사장직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09.11.12). 재판부는 감사원이 제기한 해임 사유 중 광고수입예산의 과다편성 등 3건의 경영관리 부분, 과도한 상위직 조직구조 심화 등 2건의 조직·인력 운용부분, 수원센터의 운영 등 3건의 방송시설 설치운영부분에 대해 사실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작 언론에서 주요한 논란이 되었던 법인세 환급소송 처리, 특별 승격 및 팀장인사, 별관 및 연구동 부지 개발사업 등은 인정되지 않은 사실로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대통령의 해임 재량권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 이러한 수신료 수입이 정채와 지상파방송의 광고수입 감소 및 공적책무 수행으로 인한 지출비용 증가 등 역시 재정 상태 악화에 상당부분 기여했다는 점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이어서 그 해임사유에 따른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더 높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피고(대통령)에게 주어진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서울행정법원, 2009.11.12)

해임 당시 쟁점이 되었던 대통령의 해임권한은 인정되었지만, 해임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및 이유제시 의무 위반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하에 해임은 취소되었다. 또한 국민감사청구시점에 신문사별로 주로 해임의 주요한 사유로 논란이 되었던 배임에 관한 검찰의 기소는 2009년 8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8). 현재 두 건의 재판 모두 대통령과 검찰의 항소로 인해 상급심에서 재판 과정 중에 있다.

중립적 국가기구인 법원의 판결과 경영책임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기사들을 비교해 본 결과 보수성향의 일간지들은 법원에서 해임의 사유로 보지 않는 법인세 환급, 인사 등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법원의 판단에 앞서 위법으로 단정함으로써 뉴스소비자에게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분석대상의 모든 신문이 해임의 절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에 대해서는 기사로 다루지 않음으로써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보도하기 보다는 각 신문이 뉴스소비자들의 관심과 시선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프레임에만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해임과정에서 나타난 뉴스 프레임은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에 일정한 방향의 해석을 유도하는 의미생산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5. 결론과 논의

이 연구는 정권교체 이후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갈등에 대해 신문의 보도태도



가 어떠한지, 신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주요 일간지를 대상으로 뉴스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사건 프레임과 주제 프레임을 중심으로 2차, 3차 프레임으로 프레임의 유형을 확대하고 기사에서 지배적으로 인용되는 행위자들을 해임에 긍정적인 집단과 부정적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프레임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해임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뉴스프레임을 비교함으로써 신문사별 뉴스 프레임이 어떻게 의미를 재구성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에 대해 보수성향의 일간지와 진보성향의 일간지는 기사의 양, 보도 성향 등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진보성향의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상대적으로 많은 기사량을 통해 정연주 당시 KBS 사장 해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기사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정연주 사장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의 비중을 높여 해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기사의 논조에 있어 보수성향의 신문은 당시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반면, 진보성향의 신문들은 논조에 있어 다소 차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둘째,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이라는 갈등적 이슈에 대해 보수성향의 신문들은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일화적 프레임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보성향의 신문들은 보다 심층적이며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려 노력하는 주제적 프레임을 일화적 프레임과 비슷한 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가치 결과적 측면에서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이 언론 독립에 큰 영향을 준다는 시각을 가지고 기사를 구성함으로써 해임의 원인이나 절차에 집중하는 보수성향의 신문과는 의미구성을 차별화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해임이라는 발생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춘 ‘사실보도’라는 시각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연주사장 개인에 대해 많은 부정적 측면을 많이 다룸으로써 사실상은 ‘부정적 사실보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새로 출범한 정부와 신문간의 입장이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보도 태도나 기본적인 프레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내 일간지가 어떠한 프레임으로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프레임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9개의 핵심 대상(3차 프레임)이 있었으며 연관유형에 따라 체제유지, 언론독립, 해임원인, 대립 등의 프레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해임원인 프레임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립 프레임, 언론독립 프레임, 체제유지 프레임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성향의 신문에서는 해임원인 프레임이 가장 높았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한겨레신문은 언론독립 프레임이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 경향신문은 해임원인 프레임이 근소하게 더 많이 사용되었다. 프레임을 더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보수성향의 신문에서는 경영책임, 집단대립, 해임과정에 대한 프레임이 더 많이 나타난 반면, 진보성향의 신문에서는 언론독립, 해임절차, 집단대립의 순서로 많이 나타났다.

셋째, 해임관련 기사 내에서 어떤 행위자 또는 사회집단이 인용되며, 어떠한 프레임 유형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해임에 긍정적인 집단과 부정적인 집단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해임에 긍정적인 집단은 해임원인 프레임, 대립 프레임, 체제유지 프레임, 언론독립 프레임 순으로 주로 인용되었으며, 부정적인 집단은 언론독립 프레임, 대립 프레임, 해임원인 프레임, 체제유지 프레임 순서로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해임에 긍정적인 집단은 보수적 성향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자주 인용되어 보수신문과 성향적 긴밀도를 보였다. 해임에 부정적인 집단은 해임 자체를 언론장악으로 보고 진보적 성향의 신문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기사 내에서 인용되었던 주요 사유들의 일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임의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성향의 신문은 감사원, 이사회 및 대통령의 해임요구, 제청 및 의결과정에서 제시된 해임사유 모두를 인정하여 직접 인용함으로써 해임이 당연하다는 방향의 해석을 유도한 데 반해 진보성향의 신문은 해임사유의 적용에 대해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분석 대상이 된 모든 신문들이 사법부의 판단이 된 해임 절차상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 의무 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기사화하지 않으므로써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보도하기 보다는 각 신문이 뉴스소비자들의 관심과 시선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프레임에만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공영방송사장의 해임과정에서 보수 및 진보성향의 언론은 해임이라는 사건 그 자체에 보다 집중하였으며, 정치적 성향의 유사성 및 이해관계 등의 사회적 맥락속에서 뉴스가 재구성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프레임분석을 위해 한 기사 내 두 가지 이상의 대상, 즉 사건과 주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지배적인 내용의 프레임으로 분류함으로써 한 기사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부 기사에서 기사 내의 프레임을 2차 또는 3차의 프레임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할 때 해당 기사의 지배적 논조가 혼재되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향후 유사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문단단위의 분석 또는 프레임 측정을 위한 진술문을 구성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Ⅰ 참고문헌

- 강명구 (1994). 한국언론의 민주적 개혁을 위하여. 임종철(외). 『한국사회의 비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강형철 (2006.11).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 이렇게 하자. 『신문과방송』.
- 고영신 (2007). 정권의 성격변화와 언론보도: 대통령 친인척 비리보도의 뉴스프레임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3권 1호, 156~196.
- 공공 기관장 인사 막전막후 (2008.8). 『신동아』, 110~191.
- 김동훈 (2008.5.17). 최시중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정연주 때문” 발언 파문. 『한겨레』, 6.
- 김원용·이동훈 (2005).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화연구.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166~197.
- 김춘식·이영화 (2008).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 관한 뉴스프레임연구. 『한국언론학보』, 52권 2호, 303~327.
- 박경숙 (2002). 집단 갈등 이슈의 방송 뉴스 프레임 분석. 의약 분업 뉴스 프레임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권 2호, 310~340.
- 박선희 (2001). 언론개혁에 관한 인터넷 뉴스프레임 분석. 『한국방송학보』, 15권 2호, 81~120.
- 박승관·장경섭 (2000). 한국의 정치변동과 언론권력: 국가-언론관계 모형변화. 『한국방송학보』, 14권 3호, 81~113.
- 박승관·주용범 (1995). 제5공화국 말기 개혁의제의 변동과정에 관한 미디어 프레임분석-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32, 105~15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8.18).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2008고합887.
- 서울행정법원 (2009.11.12). 해임무효처분 판결문: 2008구합32317.

- 송용희 (2005). 한국 종합일간지 기사의 사실성 입증 기제에 관한 연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회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80~104.
- 양정혜 (2001). 사회갈등의 의미 구성하기.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284~315.
- 우형진 (2006). 형식 파괴 뉴스 프로그램에서 묘사되는 한국 정치현실에 대한 프레임 분석: YTN <돌방영상> 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1호, 192~220.
- 유재천 (1991). 한국언론의 생성과 발전과정. 한국언론연구원 (편), 『한국의 언론 I』.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이정춘 (2000). 사회갈등과 방송의 역할.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사회갈등과 언론의 역할 발표집』, 1~22.
- 이준웅 (2001). 갈등적 이슈에 대한 뉴스프레임 구성 방식이 의견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6권 1호, 441~482.
- 이준웅 (2004). 언론매체이용 및 해석적 틀이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48권 1호, 28~56.
- 이준웅 (2010). 한국 언론의 경향성과 이른바 사실과 의견의 분리문제. 『한국언론학보』, 54권 2호, 187~209.
- 이진로 (2008. 10). 한국 공영방송의 정치경제학.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권위적 시장주의 시대의 언론자유』. 4~18.
- 장용호 (1987). 사회운동과 언론. 『현상과 인식』, 41, 37~72.
- 장은교 (2008.8.9). 권력, 공영방송 사장 축출/법조계 “이사회·대통령, 헌법상 권리 없다.” 『경향신문』, 2.
- Best (1995). *Images of Issues: Typifying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New York: Aldine de Gruyer.
- Chyi, H. I., & McCombs, M. E. (2004). Media salience and the process of framing: Coverage of the columbine school shooting.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1(1), 22-35.
- Cohen, A., Adoni, H. & Bantz, C. R. (1990). *Social conflict and television news*. London: Sage.
- Dimitroba, D. V. (2006). Episodic frames dominate early coverage of Iraq war in the NYT.com. *Newspaper Research Journal*, 27(4), 79-83.
- Eldman, M. (1988). *Constructing the political spectacl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ntman, R.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Entman, R. (2004). *Projections of power: Framing news,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ricson, R., Baranek, P., & Chan, J. (1991). *Negotiation, control*. London: Milton Keynes.
- Gamson, W., & Wolfsfeld, G. (1993). Movements and media as interacting system.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528, 114-125.
- Gersh, D. (1992). Promulgating polarization: Study finds media coverage of women minorities tends to be oversimplistic, which exacerbates social strains. *Editor & Publisher*, 125(41), 30-33.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Iyenger, S. (1992). *Is anyone responsible: How TV frames political issu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ellner, D. (1990). *Television and the crisis of democracy*. Boulder, Colorado: Westview.
- McCombs, M., & Ghanem, S. I. (2001). The convergence of agenda setting and framing. In S. D. Reese, O. Gandy, & A. E. Grant (Eds.), *Framing public life* (pp. 67 - 82). Mahwah, NJ: Erlbaum.
- McQuail, D. (1995). Western European media : The mixed model under threat. In J. Downing, A. Mohammadi, & A. Sreberny-Mohammadi (Eds.), *Questioning media : A critical introduction* (pp.147-164). Thousand Oaks: Sage.
- Neuman, W. R., Just, M. R., & Crigler, A. N. (1992). *Common knowled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rice & Raboy (2003).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n transition: a documentary reader*. Kluwer Law International.
- Ryan, C. (1993). *Prime time activism: Media strategies for grassroots organizing*. Boston: South End Press.
- Schmit, D. (1993). Public opinion and media coverage of labor unions. *Journal of labour research*, 14(2), 151~164.
- Semetko, H. A., &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 Syvetsen, T. (1992). *Public television in transition: A comparative and historical analysis of the BBC and the NRK*. Oslo: Norges Allmennevitenskapelige Forskningsrad. Levende Bilder nr. 5/92.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London: Collier Macmillan Publishers.
- Zillmann, D., Chen, L., Knobloch, S., & Callison, C. (2004). Effects of lead framing on selective exposure to Internet news reports. *Communication Research*, 31(1), 58~81.

(투고일자 : 2010.8.18, 수정일자 : 2010.10.17, 게재확정일자 : 2010.10.18)

## ABSTRACT

## A Study on the News Frames Represented in Dismissal Procedure of the Director General of the PSB

Sun-Wook Choi\* · Hong-Sik Yu\*\*

We investigated the frames represented in the news media coverage in Korean daily newspapers during dismissal procedure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public service broadcaster, KBS. We analyzed 470 newspaper stories in the period surrounding the dismissal. The use of news frames in newspapers depended on the disposition of outlets, conservative or progressive.

Conservative newspapers, ChoSun and DongA, described the dismissal of the director -general with a generally favorable or supportive view, but progressive outlets, Hankyoreh and KyeongHyang, reported more and non-favorable for the issue. Our results showed that conservative newspapers more often used episodic and cause for dismissal frame in the presentation of news, whereas progressive more often used thematic and media independence frames. Main frames commonly used in the news are the cause for dismissal, conflict, media independence, and regime maintenance, respectively, which are formed by 9 minor news frames.

Conservative newspapers centered on the cause attribution; management responsibility, conflicts, and dismissal procedures, but progressive focused on media independence and dismissal procedures. All newspapers selectively quoted groups, institutions and actors to enhance their messages and frames. Finally,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tories in each newspapers and the court's ruling for the dismissal.

Keywords: Frame, Public service broadcaster, KBS, Dismissal, Conflict

---

\* Ph.D student, Dept. of Mass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